

이재명 “국방장관, 민간인 바람직”…軍 문민통제 강화하나

징병제가 기본…병역대상자 ‘징집형·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택일
남북정상회담 당연하지만 어려울 것…북미회담에 한국 소외 안되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민간인 국방장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한 외교·안보 분야 정책에 담긴 '군의 문민통제 강화'에 대해 "국방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제는 (장관에) 민간인을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병역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게 한 공약을 두고 '모병제 개편인가'라는 물음에는 "당연히 징병제에 기본을 둔다"며 "모병을 하게 되면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은 군대에 안 갈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기존 제도는 직업군인으로 가면 징병의 의무가 해제되지만, 우리가 드리는 말씀은 징병 대신 직업군인이 돼라는 게 아니라 징병으로 가든 전투부사관으로 가든 복무기간이 끝난 다음에 직업군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정상회담 추진 문제와 관련,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면서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미 또는 주변국과 정상회담을 많이 하는 만큼 북한과 안 할 이유는 없고, 당연히 준비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지금은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계속 공언하는 상대라 가능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그 안에 반드시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북미회담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겠다" 하는, 소위 통미봉남 정책에 희생되지 않을

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회담이 성공해 개선 조치를 하게 되면 북측에 재정적 부담이 드는 지원 사업이 필수적인데, 자기 이익에 매달리는 미국이 대북 지원을 전담하겠나"라며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한국 정부를 패싱할 필요도, 가능성도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한미일 안보 협력과 남북관계가 상충된다'는 취지의 질문에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한 축이지만, 그것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상충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기에 북핵을 동결해 비핵화로 가야 하는데, 거기에 미국의 역할이 크겠지만 중국, 러시아의 역할도 있다"며 "모든 주변국과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 강력한 역지력이 필요하겠지만 대화, 소통하고 공존하는 길을 찾는 게 진정한 능력 아니겠나"라고 되물었다.

이 후보는 한일 관계 운용 방안에 대해서는 "친일이나 반일이나 하는 양자택일 방식이 아니라 지혜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간다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원칙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영토 문제나 과거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해서 '일본은 독일에서 배워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며 "안보나 경제·사회·문화 영역은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26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서울 마포구 을) 골목골목 선대위 광주·전남 공동위원장이 광주시 동구 조선평대 장미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특검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이수 조선평대 이사장을 만나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별취재단=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전남 누비는 정청래 골목 선대위원장…22일 간 2935km 이동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서울 마포구 을) 골목골목 선대위 광주·전남 공동위원장이 광주·전남 골목골목을 휘젓고 다니고 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총 22일 중 반환점을 돈 지난 22일까지 광주·전남 31개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총 이동거리만 2935km에 달했다. 이중 광주·전남 지역민을 만나기 위해 골목골목을 돌며 유권자

들과 악수를 하며 걸은 거리는 53.88km로, 광주도 심 뿐 아니라 전남지역 시골 농로까지 다양하게 누볐다. 도심과 전통시장 뿐 아니라 농가에서는 대형 트랙터까지 직접 타면서 유권자들에게 이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 기간 활동은 고스란히 정 의원의 유튜브에 담겼다. 선거운동 기간 라이브 방송만 63차례를 진행했고, 유튜브 동영상과 쇼츠영상은 각 9개와

545개를 제작했다.

조화수는 총 5427만 3172회에 달했다.

정 의원은 "남은 11일간의 선거운동 기간에도 지역민들을 골목에서 직접 만나 지지를 호소 할 것"이라면서 "전반기 활동보다 더 많은 활동을 통해 선거운동과 관련해 제작한 동영상 조회수 1억 뷰를 달성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문수 “헌법에 ‘지방분권’ 명시…행정수도 완성”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6일 '지방분권'의 헌법 명시와 행정수도 완성을 골자로 하는 지방시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공개했다.

김 후보는 개헌을 통해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고 천명하고, 중앙정부의 인력·재원 및 경찰권은 물론, 농지 이용·그린벨트 관리 권한도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순수하게 지방비를 사용해 추진하는 1천억원 이하 사업의 중앙투자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기준을 현재의 '총규모 500억원 이상·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총규모 1000억원 이상·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방정부 재정 확충을 위해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현재 연간 14조7000억원에서 30조원으로

증액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6대 4로 점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에 남아 있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등 행정기관도 이전하는 동시에,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외에도 600여개 이상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을 취임 1년 안에 확정 짓고, 해당 공공기관의 지역대학 출신자 채용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김 후보는 지역 신성장동력 확보와 교통 인프라 확충도 약속했다.

충청권·대구경북권·광주전남권·부울경권 등 4대 대광역권을 구축하는 한편, 광역급행철도(GTX)를 대광역권으로 확장하고, 동서 10축·남북 10축 등 국가 간선 도로망을 대대적으로 건설해 지역 성장 기반을 확충한다.
/연합뉴스

김문수·이준석 단일화해도 이재명 ‘승리’ 이준석 “단일화 가능성 0%

이재명 48%·김문수 39%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단일화하더라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한국리서치가 한국방송(KBS) 의뢰로 전국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 전화면접 조사(5월20~22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8%포인트, 응답률 19.5%)에 따르면, 3자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 49%, 김문수 후보 34%, 이준석 후보 8%였던 지지를 수치가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를 가정한 대선 가상대결에서 이재명 후보 48%, 김문수 후보 39%로 나타났다.

범보수 후보를 이준석으로 바꾸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49%로 29%인 이 후보를 가뿐하게 앞섰다.

두 후보가 단일화 하더라도 각 지지층이 온전히 한쪽으로 흡수되지 않은 셈이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지난 20~21일 한국 갤럽에 의뢰해 전국 1007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화면접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15.8%) 결과 이재명, 김문수 후보 양자대결에서 이 후보가 51%로 김 후보(41%)를 10%포인트 격차로 앞섰다.

이준석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50%를 얻으며 38%를 얻은 이준석 후보를 크게 앞섰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비교적 열세인 보수층이 결집하는 모양세지만, 대선을 코 앞에선 시점에서 진행한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김문수, 이준석 후보를 앞서고 있어 단일화 이슈가 막판 선거판을 뒤흔들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6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단일화할 가능성에 대해 "0%로서 김 후보가 사퇴하고 투표용지에 이준석과 이재명의 대결로 간소화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단일화하지 않으면 너희 때문에 진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느니 "정치권에서 매장시키겠다"느니 하는 협박을 요즘 많이 듣는다"며 "이런 풍경이 한국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만약 정말 이재명 후보를 막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오늘 즉각 후보를 사퇴하시면 된다"며 "그러면 국민들은 합리적이고 계엄에서도 자유롭고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에서도 자유로운 저 이준석으로 많은 표를 물어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